

‘역사 해석과 역사 왜곡’ 학술 세미나 자료집

□ 개 요

○ 행사명 : ‘역사 해석과 역사 왜곡’ 학술 세미나

○ 일 시 : 2016년 7월 8일 오후 2시

○ 장 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209B 세미나실

○ 행사 취지

(1) 5.18 왜곡을 비롯한 현대사 왜곡이 증오발언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2) 금번 학술 세미나는 ‘역사 해석은 필연적으로 역사 왜곡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가’, ‘만약 해석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과연 역사 서술의 객관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를 묻고, 역사 왜곡과 역사 해석과의 관계를 ‘5.18’과 베트남 ‘후에 학살’ 등 국내외 사례를 통해 학술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내 용

(발표 1) “5.18 역사왜곡의 실상과 그 정치적 함의”

발표자: 김정한(서강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토론자: 정문영(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발표 2) “정치 없는 애도, 끝나지 않은 전쟁—1968년 베트남 ‘후에 학살’을 중심으로”

발표자: 심주형(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자: 최정기(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1] 5.18 역사 왜곡의 실상과 그 정치적 함의

김정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역사 해석과 왜곡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작업은 무한할 수 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시간에 속한다고 해도 역사는 주어진 사실들의 묶음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재해석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동태적인 현실이다. 5.18 광주항쟁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다양한 해석에 열려 있고, 누구나 자격이나 제약 없이 새로운 해석과 글쓰기를 실험할 수 있다. 5.18 광주항쟁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재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현재의 시간으로 다시 불러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부활'시키는 풍요로운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역사 해석이 학술적인 가치나 타당성, 대중적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사실들과 사실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전체적인 상황 속에 배치하며, 역사의 흐름과 맥락을 계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해석과 왜곡이 갈라진다. 없었던 사실들을 인위적으로 가공해내거나, 사실들을 연결하는 합당한 추론이 부재하거나, 전체적인 상황 및 맥락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들은 해석이 아니라 왜곡이다. 5.18 광주항쟁에 대한 왜곡의 역사는 항상 그 진상 규명의 역사와 동시대적이었다. 항쟁 당시부터 군부와 정부에서 제시한 폭도(또는 '난동자')론, 불순 정치집단론, 유언비어론들이 왜곡의 담론이라면, 그에 맞서 학생과 지식인을 비롯해 민주화운동세력은 진실한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과 더불어 과잉진압론, 민주화론, 민중론, 혁명론 등을 가능한 해석으로 제시해왔다. 5.18이 국가의 공식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승인을 받은 후 오늘날까지도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 모든 원천적 상상력은 폭도론, 불순 정치집단론, 유언비어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 A에서 ‘북한군 침투 개입설’을 제기한 것도 다르지 않다. 일부 탈북자들과 보수파 인사들의 신뢰할 수 없는 증언과 주장은,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가 발표한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와, 1997년 국방부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일 뿐이다. 2006년 12월 20일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모임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임천용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5.18 시기에 ‘북한군 정예 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시작된 북한군 침투 개입설은, 당시부터 보수파 언론인인 조갑제조차 여러 차례 “개연성이나 증거가 없다”고 반박함으로써 이른바 ‘임천용-조갑제 논쟁’으로 전개된바 있으며, 2013년에 새롭게 소개될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는 ‘마이너리티 정서’를 가진 10-30대 젊은층 이용자들이 주도한다고 알려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해 5.18 광주항쟁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담론들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재생산되어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른바 ‘일베 현상’ 또한 2013년의 별난 징후나 증상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종편 사건을 계기로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물론 역사 왜곡과 폄하에 대해 5.18 관련 단체들이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인터넷 상의 자극적이고 무례한 표현들이 일정하게 잠잠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되지만, 아마도 매년 5월마다 이와 같은 해석과 왜곡을 둘러싼 갈등은 다시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5.18 왜곡과는 별도로 ‘일베 현상’이 나타난 배경과 원인에 대해 차후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 글에서는 5.18 역사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출간된 □역사로서의 5.18□ 중에서 항쟁 시기를 다룬 1권과 2권의 주요 논점들을 검토하고, 그 정치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필자가 일베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5.18에 관해 제대로 된 논변을 제시하고 있는 게시물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대개 김대령(역사학도)의 블로그를 전거로 삼거나 이 책을 참조하라는 내용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5.18 왜곡 담론들은 특별히 새롭게 발견된 사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기존 자료들을 임의로 가공하여 대동소이한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2. 5. 18 역사 왜곡의 논리와 근거

□역사로서의 5. 18□의 전체적인 주장은 5. 18이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기하는 논점들은 유언비어 원인론, 무장폭동 사전 준비론(배후세력론), 외부 침투론, 시민군 가해자론, 시민군 선제 발포론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각각의 주요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언비어 원인론

“광주사태의 발단 자체가 거짓 프로파간다였다. 1980년 5월 18일 전남대총학생회장 박관현이 여수 돌산으로 가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박관현이 죽었다고 외쳤다. 이것이 광주사태라고 명명된 5. 18 사건을 야기한 거짓말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거짓 소문이 광주시내로 짝 퍼져나가고 있었을 때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없었다.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악성 유언비어에 휩쓸린 군중이 파출소로 달려가서 화염병을 던지며 방화하고 경찰을 인질로 납치하였다. 이것이 5. 18 재판에서 헌정질서 수호 행위로 판단한 사건이다.”

① 김대중이 장악한 민청협이 ‘전두환은 박정희의 양자다’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1권 47쪽) → 그런데 당시 광주 시민들, 심지어 계엄군과 전경들, 타 도시 시민들조차 전두환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 → ‘전두환 물러가라’, ‘전두환 찢어죽이라’는 구호는 일부 민중봉기 주동자들이 외치는 것을 일반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서 한 것이다. → 전두환이 누군지도 모르는 데 전두환과 싸우기 위해 무장까지 하는 일이 가능한가? (1권 60쪽) → 전두환이 누군지도 모르는 데 어떻게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을 강압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에 항의했겠는가? (1권 68쪽)

* 전두환이 양자라는 말은 박정희가 키워낸 유신 장교로서 박정희처럼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의미이며 유언비어라고 볼 수 없다.

* 전두환의 이름, 얼굴, 직책 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전두환은 1979년 10월 28일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11월 6일 전모를 발표했으며, 이는 모두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다. 이에 대해 김대령은 텔레비전 보급률이 낮았다는 논리를 편다.

* 전두환이 누군지 몰랐다고 해도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하려 하기 위해 계엄령을 확대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더구나 5. 18 비상계엄확대와 계엄군의 만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군부의 핵심에 전두환이 있으며,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② 5월 18일 광주사태의 기폭제는 박관현 사망설 유언비어이다. (1권 69쪽) → 누군가 박관현이 죽었다고 외치자 이 유언비어가 시민들에게 퍼져 나가 순식간에 파출소를 습격하는 시위군중이 형성되었다. → 지하조직인 전남 민청협 소속 윤상원, 정동년 등이 박관현을 총학생회장에 추대했다 → 박관현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광주 운동권은 박관현 사망설에 대중이 현혹되도록 방치하고 고의로 유포했다. (1권 82쪽) → 정동년 등은 학생 시위를 격화시키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릴 계획을 사전에 갖고 있었다 (1권 91쪽).

* 왜 박관현 사망설이 널리 퍼질 수 있었는가? 계엄군의 만행이 있었기 때문에 박관현 사망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③ 5월 21일 오후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다 (1권 98쪽) → 그러나 헬기 기총 사격은 없었고 요란한 총소리는 시민군 기관총이 헬기를 향해 사격하는 소리였다. → 이 유언비어 제조자는 조비오 신부인데, 그의 증언을 보면 헬기에서 기총사격을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기총사격 소리를 들었다고 할 뿐이다. (1권 101쪽) → 광주사태 주동자 김현장은 조비오 신부의 거짓말을 확대재생산하여 ‘전두환의 광주 살육 작전’이라는 유언비어를 제조해 전국에 유포했다. (1권 102쪽)

* 헬기 기총 사격은 실제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

* 이 또한 계엄군의 만행과 집단 발포로 인해 대중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유언비어.

④ 5월 25일 대자보와 유언비에 미국이 시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보냈다는 유언비어가 들어 있다. (1권 104쪽) → 광주사태 주동자들은 1주일만 더 버티면 승리할 수 있다는 유언비를 퍼뜨려 무장봉기를 선동했다. (1권 108쪽) → 광주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낮아서 미군 함대가 시민군을 도우러 온다고 믿고 있었다. (1권 116쪽) → “김현장 등 광주사태 주역 운동권이 훗날 1982년 미문화원에 방화했을 때 그것은 친미 유언비에 어울리지 않는 반미 행동이었다. …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광주사태 때 미항공모함이 입항한 것은 시민군의 무장봉기 진압에 미국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던 까닭이다. 어떻게 그들의 해석이 180도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 둘째로, 이렇게 해석이 180도 바뀌었을 때, 미국이 시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보냈다는 유언비에 속은 것이 분했기 때문이다. 운동권의 그런 과격한 반미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질문도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질문은, 만일 그렇게 해석이 바뀌어 미문화원에 방화할 것이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미 항공모함이 시민군을 지원할 목적으로 입항하였다는 유언비어들을 퍼뜨렸다는 말인가?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그들이 미국이 광주 시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보냈다는 유언비에 속은 것이 분했다면 그 책임을 유언비어 유포자에게 물어야지 왜 엉뚱하게 미문화원에 방화하였는가?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미국이 광주 시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보냈다는 친미 유언비어와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낸 것에 응징으로서 미문화원에 방화하는 반미행동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1권 121-122쪽)

* 5. 18 당시 친미적 관점을 주동자들의 음모로 보고 있다.

* 5. 18 이후 반미운동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⑤ 차명숙과 전옥주는 유언비를 가두방송하고 다녔다. → 전옥주는 남동생이 없음에도 자기 남동생이 죽었다고 방송했고, 결혼한 적이 없는 처녀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방송했다 → 전옥주의 유언비어 선무방송으로 결집한 시위군중이 과연 헌법수호기관인가? → 전옥주는 시위군중 지도자이고 상징적 존재였는데, 전옥주가 과연 헌법수호기관인가? (1권 123쪽) → 전옥주를 이용하는 세력 중에 불순세력이 있었는데, 이는 누군가에게 쪽지를 받고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광주 세무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방송했다는 증언으로 알 수 있다. → 세무서 방화를 선동하는 것이 헌법 수호인가? (1권 133쪽)

*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으로 전옥주 배후에 불순세력이 있다고 추측.

⑥ 시민군은 유언비어로 모병된 것이다. → (“무작정 학생들 사이에 끼여 학생들이 돌을 던지면 나도 던지고 노래를 부르면 따라 부르며 행동을 같이 했다”는 조철웅의 증언을 인용) “이 증언은 과잉진압이 과격시위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에 췌기를 박는다. 5월 18일 전경이 과잉진압 하였기에 조철웅이 폭력 시위대에 합류하였는가? 아니다. 진실은 정반대였다. 폭력 시위대가 강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전투경찰이 만만해보였기에 그는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싸움판에 끼여들었던 것이다.” (1권 148쪽) → 다수의 시민들이 무장봉기에 가담한 동기는 유언비어 때문이다. (1권 151쪽)

* □역사로서의 5. 18□은 시종일관 계엄군의 과잉진압과 참혹한 학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봉기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

2) 무장폭동 사전 준비론(배후세력론)

(조희연의 남민전 연구를 인용) 1980년 이전에 통혁당 노선을 계승한 남민전은 이미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 18□의 탈북자 증언을 인용.) “1980년 김대중의 지지 기반은 김일성이 지원하는 ‘민청학련’ 및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들이었다.” (1권 161쪽) → “광주 망월동의 5. 18 묘역에 남민전 전사로서, 공산주의 사상가로서 혁명운동을 하던 김남주가 1994년 2월 16일 묻혔다. 도대체 1979년 10월 4일 남민전 사건으로 체포되어 1988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되었던 그가 광주사태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5. 18 묘역에 묻혔는가?” (1권 162쪽) → 윤상원을 비롯해 광주운동권 중에는 남민전 전사들과 투사들이 많았다. → 1979년 남민전의 최원석 동아건설회장 집 습격 사건은 1980년 5월 21일 무기 탈취 사건의

예행연습이었다. (1권 169쪽) → (박노해의 윤상원에 관한 글을 인용) 5월 9일 윤상원은 무기고 습격과 총기 확보, TNT제작을 역설했다. (1권 178쪽) → 윤한봉은 군사작적용 지도를 준비해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1권 181쪽) → 광주운동권, 가톨릭농민회, 전남 민청협은 5월 19일에 예비군 무기고를 접수할 계획을 세우고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1권 191쪽) → “대통령 편에서 볼 때 국가는 실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그래서 국가전복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결단[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을 내렸던 것이다.” (1권 205쪽) → 5.18 이전부터 성명서를 보면 민중봉기를 선동하고 있다. “유신 독재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자!!” → 성명서와 선언문 대부분은 왕년의 빨치산이 박헌채가 대필한 것이다. (1권 211쪽) “양 필사본에서 강조하는 문장에 두 개의 느낌표<!!>를 찍은 것도 동일인의 문체임을 그대로 드러낸다.” (1권 217쪽)

* 대부분 음모론적 사고.

* 소수 지하 그룹이 평소에 무장봉기를 계획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행동 차원보다 ‘논의’와 ‘고민’의 차원이었다고 봐야 한다. 그들이 5.18을 지도하거나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시민군 가해자론

“광주사태 기간 동안 사상자가 발생하였던 가장 큰 원인은 시민군 총기 오발 사고와 시민군끼리의 총격전, 시민군 운전 미숙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등이었다.” (2권 13쪽).

<5.18기념재단>에서 마련한 「GIS로 그리는 5.18 희생자 지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165명 가운데 M16 100명, 카빈 27명, 타박사(곤봉, 개머리판 등에 의한) 14명, 차량사 13명, 자상(대검 등에 의한) 6명, 기타 총상 2명 등이다.

“특히 5.18 사망자 GIS 지도 제작 과정에서 신군부가 5.18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분류하면서 계엄군에 의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M16 사망자를 카빈이나 기타 총상 사망자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5.18 이후 이뤄진 사망자 검사에서

카빈이나 기타 총상 등으로 분류됐던 5.18 사망자의 사인이 사실 확인 결과 M16으로 변경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그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정수만 전 회장에 따르면 165명 중 23명의 사망원인이 수정됐는데, 그 가운데 카빈이나 기타 총상 등에서 M16으로 사인이 바뀐 경우가 13건이었다. 이는 사망자 검시 과정에서 총기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지만 신군부가 시민군간 교전에 위한 사망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계엄군이 사용하지 않았던 카빈에 의한 사망자 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5.18 민주화운동유족회 정수만 전 회장은 "신군부가 M16에 의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시민군 간 교전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 처럼 M16 사망자를 카빈으로 인한 사망자로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① 아이가 들고 있는 영정 사진 속 조사천씨. 사인이 칼빈 소총에 의한 사망이고, 따라서 시민군의 총격에 사망한 것. (2권 17쪽)

「보안사 505부대 검시참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30. 조사천 5월21일 14:00 기독교병원 사망 / CAR 좌전흉부 관통상 (1*1 맹관) / 사망시간, 신분, 나이에 비추어. 2남 1녀의 가장, 노모 모신다.”

5. 18 종료 후 사체 검안위원회에 참여한 “당시 의사 2명과 목사는 난동자(폭도)로 분류될 경우 위로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양민(비폭도)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군에서는 M16 총탄을 맞은 경우 군에 저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폭도로 분류하려고 했으나 의사와 목사들이 반대했다. 처음 폭도로 분류된 것은 20여명이 조금 넘었으나 군에서는 이 정도의 비율이면 곤란하다고 하여 격론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8명이 폭도로 분류됐다.”

② 광주 교도소 습격 사건

5차에 걸친 광주교도소 습격으로 시민군 28명 사망. (2권 103쪽 이하)

「12. 12, 5. 18 고소고발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7차에 걸친 교도소 습격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습격을 기도한 흔적이 없다.

“광주교도소는 ... 광주-담양, 곡성, 순천 쪽으로 빠지는 국도와 서울-순천 간 고속도로가 측면과 후면으로 통과하는데 이 고속도로에 광주 동부 인터체인지가 교도소 정문 앞을 거쳐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앞, 뒤, 옆으로 뻗어 있는 도로들이 교도소 옥상에서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따라서 당시 시위대원들이 무장 이전부터 도내 확산 또는 광주 소식 전달차 각종 차량을 이용해 담양, 곡성, 순천 방향으로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21일 오후에는 무기 탈취를 위해, 그 이후에는 도내 확산을 위해 빈번하게 들락거렸던 것이다. 광주교도소를 통과하기 위해 달려가는 시위대나 선량한 민간인을 부지기수로 공격해 놓고 ‘교도소 습격 기도’를 격파했다는 전과로 왜곡해서 계엄사령부나 보안사령부에 보고했으며 계엄사령부는 이를 국민과 언론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폭도’들의 소행으로 과장해 발표했을 개연성이 높다.”

4) 외부 침투론

① “시민군 중 광주시민들은 극히 적었으며 시민군 대부분은 외지인들이었다. 시민군 주력부대는 5월 21일 갑자기 광주로 들어왔다가 26일 갑자기 광주를 떠난 무장세력이었는데, 이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었다.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며 21일 전북 담양을 경유하여 광주로 들어온 수백 명의 시민군이 광주시민들이긴커녕 대한민국 국민인지조차 우리는 모른다. 광주사태 주동자들이 외부 지원세력이라 불렀던 이 수백 명의 시민군은 광주시민들이 아니었다.” (2권 140쪽)

② “둘째 부류의 시민군은 광주시민이 아닌 자들이 시민군 차를 몰고 다니며 시골에서 시민군의 차에 태워 데리고 다녔던 청년 혹은 청소년들이었다. 그래서 나주, 영암, 영산포, 해남, 진도, 완도 등에서 시민군의 차에 실려 동원된 시민군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주로 고등학생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광주시민이란 말인가? 그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었다.” (2권 140-141쪽)

③ “셋째 부류의 시민군은 광주 거주자로서 시민군이 되었던 자들인데, 그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중고생들이거나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어린이를 시민이라 부르지 않으며, 미성년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정체불명의 무장단체가 무기를 탈취해 와서 무기분배를 하였을 때 광주시민들은 받기는커녕 피난을 가거나 대문을 꼭꼭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무기를 주면 덱석 받는 연령층은 주로 중학생 연령층이었다. 그래서 광주 거주자들로서 시민군이었던 자들은 대부분 중고생들이었거나 학교에 다니지 못한 청소년이었던 것이다. 5. 18재판 원심 법관들은 시민군 조직을 국민이 주권행사를 한 헌법기관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 참정권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주권행사를 한다는 말인가? 중학생들이 총을 들면 참정권이 저절로 생기며, 그들의 무장봉기는 주권행사이며, 그들의 조직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법리가 있는가?” (2권 142쪽)

①의 북한군 침투론

①-1. 300명 단위론

“시민군 대부분은 광주시민들이 아니라 외지인들이었다는 증거 중 하나가 탈북자들의 증언과 남한 자료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300명 단위의 시민군 숫자이다. 300 더하기 300은 600, 300 더하기 300 더하기 300은 900이란 셈법이 똑같이 등장한다.” (2권 184쪽)

“「자유북한군인연합에 따르면」 광주에 투입된 인원은 모두 600명이었으며 선봉부대는 2군단 정찰대대 300여 명이였다. 나머지 300여 명은 인민군 각 군단, 저격여단 등에서 차출한 정예병력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2권 184쪽)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300명씩 두 무리의 북한군이 모두 남한에 침투하였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지의 사실은 미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저 중요한 사실은, 무장 시민군 수도 300명씩 두 무리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로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2권 185쪽)

(「5. 18 관련사건 수사결과」를 인용) “[5월 21일] 09시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00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00여 명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56대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

①-2. 서울에서 온 500명의 대학생

김영택(당시 동아일보 기자)은 5월 22일 오후에 나타난 500명의 대학생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오후 3시 8분에는 서울에서 500명의 대학생들이 도청 광장에 있다고 해서 이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크게 벌어졌다. ... 그러나 이들이 과연 진짜 대학생들이었는지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광주 외곽은 이미 20사단 병력까지 동원되어 철옹성 같이 봉쇄되어 있는데 어떻게 500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광주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김영택 기자는 500여 명의 가짜 대학생들에 대한 의문을 평생 품고 가야 했다. 가짜 대학생 500여 명이 어떻게 22일 광주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는 오랫동안의 의문이었는데, 이제 그 의문이 풀렸다. 그들은 광주 외곽이 봉쇄되기 전에 광주로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그 전날 21일 오전 9시에 갑자기 등장하여 전라도 일대 38개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바로 그 300여 명 더하기 300여 명=600명의 시민군이었던 것이다.” (2권 187쪽).

그러나 김영택이 제기하는 의문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 위에서 인용한 대목의 다음 쪽에서 김영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500여 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연고대생 1,600여 명이 논산을 출발한 후 장성까지 왔다가 저지돼, 겨우 연대생 30여 명만이 광주에 들어왔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다. 이 30명이 들어온 것도 의문인데 어떻게 50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 때문에 이들이 시위를 하기 위한 대학생이 아니라 계엄사령부 또는 그 예하 군 기관에서 보낸 정보요원이나 프락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문이 제기되어 있었다.”

①-3. 공수부대 제압의 의문

“광주의 몇몇 민간인들이 [21일] 오후 3시 반에 전라도 각 지역으로 무기를 탈취하려 떠난 지 2시간도 채 못 되어 2개 공수여단과 1개 전투사단을 광주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광주를 해방시켰다는 기존의 5.18측 셈법으로는 도저히 얘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2권 208쪽)

“광주 시민군에게 군사적 조직이라는 것은 없었다. 도청에 일정 정도의 상황실이 있었다고 하지만 군사 무기로 무장한 시민군을 이끌기 위한 체계를 갖춘 지휘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시민군이 사용했던 무기도 보잘 것 없는 것들이었다. 계엄군의 최신식 무장과 시민군의 원시적 무기는 애초에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계엄군이 조선대 뒷산으로 철수하였다는 것을 시민군들은 한참이 지나도록 알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시민군이 얼마나 긴급히 급조되었고 시민군 상호간에 통신수단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이들이 당시의 상황을 즉자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계엄군의 동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계엄군을 물리치겠다는 대의명분만 대단히 높은 상태였다.” 시민군은 8시경에 뒤늦게 철수 사실을 알아차리고 도청을 접수했다. 오히려 공수부대의 도청 철수는 5월 21일 오전에 계엄사령부가 재진압 소탕 작전을 수립하면서 계엄군의 외곽 재배치를 결정한 사전 작전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①-4. 복면부대의 출현

(MBC뉴스를 인용) “김영택씨는 또 5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왔다는 대학생 300여 명이 시위에 합류했으며 오후부터는 복면을 쓴 사람들이 시위 군중 속에 나타나 강경구호를 외치거나 시민군의 총기반납을 저지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여 이들의 정체에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권 191쪽)

이와 관련해서도 김영택은 전혀 다른 방향의 의문을 제기한다.

“군과 경찰이 철수해 표면상 감시자고 없는 민중 자치시대가 된 22일 오후부터 복면부대가 등장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저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문이다. 차량 위에서 그들이 벌이는 시위는 과격했을 뿐만 아니라 선동적이었다. … 그리고 이들은 수습대책회의나 시민대회에는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채 대부분 차량을 타고 다니며 강경한 구호를 외쳐대거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강경파들이었다.” “[5월 31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광주사태의 전모’를 보면] 이것은 계엄사령부가 정보요원 또는 공작요원을 대량으로 투입했음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대목이다. 군이나 경찰이 상황판단 또는 재진압작전을 위해 정보요원을 대거 투입했으리라는 짐작이 쉽게 간다. 그리고 요원들이 자기의 얼굴과 신분의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복면을 했을 가능성은 많다.”

5) 시민군 선제 발포론

“21일 오후 1시경 울린 최초의 총성의 진실은 시민군 선제 발포였다. 시민군과 계엄군과 기자 등 총격전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이들은 한결 같이 시민군 총에서 울리 총성이었다고 증언한다. 도청 광장에서 총성이 울리기 전에 시민군 점령 지역 지원동 쪽에서 먼저 총성이 울렸다. 그 첫발의 총성은 그날 오전 화순에서 무기를 탈취해온 시민군이 쏜 총성이었다. … 김영택 동아일보 광주주재 기자는 1988년 광주청문회 때 시민군 총성이 먼저 울렸다고 증언하였(다).” (2권 376-378쪽)

여기서도 김영택의 진술은 이와 다르다.

5월 21일 [1시 정각 애국가가 울리며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하기 직전인] 12시 58분에 일부 시위대원들이 관광버스 2대를 몰고 공수부대가 장악한 도청광장에 진입하여 공수부대가 즉각 사격을 가해 운전기사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그와 동시에 다른 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대해 김영택은 “이 총성을 두고 공수부대 측과 항쟁주체 간에 서로 상대방의 발포라고 주장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제2사령부나 계엄사령부의 상황일지는 21일 15시 50분 이후에야 시위대의 무기 탈취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계엄사령부 상황일지, 1980년 5월 21일자)는 사실에서

시위대의 발포는 없었음이 분명하다.”

3.5.18 역사 왜곡의 정치적 함의와 과제

첫째, 전체적으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과 만행, 학살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무장봉기를 준비한 지하 배후세력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시민들의 죽음이 계엄군의 가해 때문이 아니라 시민군의 가해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셋째, 5.18에서 대부분 외지인이거나 미성년자가 많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광주 시민들이 중심적인 주체가 아니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넷째, 북한군 침투론은 국내의 여러 증언과 논문을 임의로 짜깁기한 데 불과하고, 일부 탈북자의 신빙성 없는 증언을 제외하면 근거가 전혀 없다.

다섯째, 확인되지 않은 시민군의 선제 발포론을 내세워 계엄군의 집단 발포를 변호하려 한다.

이상의 역사 왜곡은 궁극적으로 5.18의 학살자들을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또한 계엄군의 폭력과 학살을 남북분단과 좌우대립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정당화하려고 한다.

5.18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과제를 생각해보자면, 역사 왜곡 담론을 하찮게 치부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일일이 반박하고 바로 잡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학살 부인 처벌법’을 제정해 5.18의 학살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행위에 법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발표 2] 정치 없는 애도, 끝나지 않은 전쟁_1968년 베트남 '후에 학살'을 중심으로

발표자: 심주형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연구교수)

'남부 해방' 그 후

201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역에서는 '남부해방과 조국통일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펼쳐졌다. 그 중 가장 큰 행사는 어김없이 남부의 호치민시에서 역대 당서기들과 총리, 그리고 군부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남부해방 40주년 기념 퍼레이드'였다. 베트남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54개의 종족 복장을 한 남녀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휘장을 끌며 등장하면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공산당기와 베트남국기, 그리고 대형 '호치민 주석' 사진 행렬이 그 뒤를 따랐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곤(Sài Gòn)의 대통령 궁에 진입했던 '390 탱크'의 모형이 '대승리'를 상징하며 군복을 입은 남성들과 화려한 아오자이를 입은 여성들의 손에 이끌려 등장하고, 뒤이어 베트남 인민해방군의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젊은이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풍선을 날리며 끝을 맺은 이날 행사의 주제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물과 산이 하나의 끈으로 엮은 베트남(Việt Nam - Nước non một liền dải)'이었다.

베트남 정부 추산, 약 2백만 명의 민간인과 110만 명의 공산진영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은 전쟁이 끝난 지 40주년을 기리는 행사였으나, 이미 '당-국가적 전승 기념일'로서 그 의미가 고착화되어 박제화 된 행사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같았다.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베트남이 한때 적국이었던 한국·미국등과 수교하면서, 베트남 공산당은 "과거를 닫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지표를 내걸고 전체 인민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미래지향적' 사고로 나아갈 것을 독려해 왔다. 역설적이지만, 당-국가의 '미래'에 대한 강조는 '지난 역사'에 대한 대중적 무관심을 발생시켜왔다. 오늘날 베트남 전체인구 중 40세 미만 인구가 65.8%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그나마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전쟁기억’은 세대적으로 ‘뭉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4월 30일’은 적어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관점에서는 ‘전승의 날’ 혹은 ‘해방의 날’이기에 하나의 국가적 ‘축제’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날은 전 세계에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교포’들과 디아스포라, 특히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형성된 150여만 명에 이르는 상당수 재미 베트남 교포들 사이에서는 ‘국가적인 한의 날’이자 ‘망국의 날’로 기억되는 날이기도 하다. 해마다 ‘4월 30일’이 되면 베트남 국내에서는 축포와 불꽃놀이를 즐기는 반면, 해외에서는 분노의 언어들 이 거리로 나와 과거의 기억들을 상기하며 서로 ‘다름’을 확인하는 상황들이 반복되어 왔다. 베트남이 개혁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2007년 WTO에 정식 가입한 이후로는 내국인과 해외 교포들의 교류와 접촉이 급속히 확대되었고, 상호 경제적 이해가 정치적 반목을 잠재우는 일들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쟁이 베트남인들 사이에 남긴 상흔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제기와 해법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베트남전쟁에 관한 상당수 서구의 성찰적 관점들은 베트남전쟁을 ‘민족해방 전쟁’으로 혹은 ‘제3세계 인민들의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남베트남 정부를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 규정하고 ‘미제국주의’와 동일시하며,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제 아래 있던 베트남 남부 지역을 북베트남(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남부 인민들—남베트남 임시 혁명정부’로 표상되는—과 함께 ‘해방’했다고 본다. 이 관점은 오늘날 베트남 정부의 공식 역사서술과 상당수 서구학자들의 해석이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듯 전쟁의 성격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 ‘독점적인 폭력기구’의 상호작용과 인구 및 사회적 자원의 동원과 통제, 그리고 폭력의 공포와 일상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전쟁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생산성(negative productivity)’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베트남전쟁이 한국전쟁 이후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던 아시아적 냉전질서 하에서, 양극화된 거대권력들 간의 ‘대리전’ 혹은 ‘제 3세계 민족해방전쟁’의 아시아적 사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폭력의 일상극’을 통해 만들어낸 효과와 다양한 내외부적 단층들의 형성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쯔엉 사(Trường Sa)’ 군도—중국에서는 남사군도(南沙群岛)라고 한다—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빈번해지고 격화되면서, 베트남 국내와 해외 베트남인

디아스포라들이 한 목소리로 중국을 비판하며 민족적 자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전례 없이 단일한 ‘민족적 감정’이 성장해 가는 한편에서 여전히 베트남전의 기억, 특히 ‘후에 학살’의 기억은 그것이 오늘날 베트남 ‘당-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른바 ‘1968년 설 총공세와 봉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종전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승전과 패전 여부나, 이념상의 차이가 아니라 전쟁 중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두고 근본적인 ‘불화’를 끊임없이 재활하는 상황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고 ‘죽임’을 상기하는 하나의 애도의 정치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오늘날 ‘탈냉전시대’의 베트남의 민족주의를 재구성하는 문제와도 밀접히 닿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다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베트남전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지배적 시각으로부터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베트남 전쟁사를 해석하는 외부자적 관점에만 치우치거나, ‘외세의 역할’을 전쟁사의 중심에 놓고 바라보는 베트남의 공식사(official historiography)적 관점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질문이지만, “전쟁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라는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경우에도 베트남전을 ‘내전’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보인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정치학자 루돌프 럼멜(Rudolph Rummel)은 제노사이드(Genocide)와 정치살인(Politicide) 그리고 학살(mass murder or massacre)등을 포괄하는 민간인학살 개념으로 데모사이드(democide)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 개념에 따라 베트남전 희생자에 대한 통계적 추산작업을 진행하였다(Rummel 1998). 그에 따르면 전쟁 기간 중 베트남에서 미군에 의한 데모사이드는 약 4,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고, 한국군의 경우엔 약 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은 최소 약 131,000명에서 최대 302,000명, 남베트남은 57,000명에서 최대 284,000명에게 데모사이드를 자행했다. 이 추산치는 군사작전과 전투 중에 사망한 군인, 시민군 및 민간인 수를 제외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추산의 정확성의 문제, 그리고 죽음을 숫자놀음으로 만드는 통계학적 폭력성의 문제는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럼멜의 추산과 통계치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트남에서 분단과 전쟁이 지속된 1954년에서 1975년까지의 기간 동안, 베트남인들 스스로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거대한 규모의 인명살상을 상호간에 자행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외국군대를 배제하더라도 상호간 직접적인 정치적 폭력을 오랜 시간 지속적이며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폭력이 만들어낸 공포와 죽음이 낳은 ‘앙심 혹은 복수심(Thủ Hận)’의 계보와 사건적 맥락들을 추적하고 그 현재적 재현양상과 담론적 재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상호적으로 빼앗고 잃어버린 생에 대한 애도의 조건을 조명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또한 냉전적 분단체제의 연장으로써 ‘해방 이후’ 혹은 ‘조국통일 이후’라는 베트남의 민족적 상황이 탈냉전시대 지구화된 조건에서 재구성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68, 후에, ‘총공세’와 ‘학살’ 사이

1954년 한국전쟁의 ‘종전(終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열렸던 제네바 회담은,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던 또 다른 전쟁에 휩쓸리고 말았다. 회담 직전 베트남 북서부 디엔 비엔 푸(Điện Biên Phủ)에서 대패하고 철군을 모색하던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든 지속시키고자 했고, 한국전쟁을 통해 아시아의 냉전질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미국 또한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던 베트남 민주 공화국(Việt Nam Dân Chủ Cộng Hoa; 북베트남)으로 표상되는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을 봉쇄(containment)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북베트남의 편에서 회담에 참여한 소련과 중국의 경우 한국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차이나 문제에 미국의 개입을 막고자 했고, 스탈린의 죽음(1953년)으로 불안정한 소련의 정치상황과 미국과 연속된 전쟁을 치루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중국의 상황은 북베트남에 ‘일시적 분단’을 받아들이게 하는 외적인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북베트남의 경우에도 상황은 녹녹치 않았다. 디엔 비엔 푸에서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인명 손실을 입었고 하노이(Hà Nội)와 하이퐁(Hải Phòng) 등 북부의 주요 도시는 여전히 막강한 화력을 지닌 프랑스군의 지배하에 있는 실정이었다. ‘대의’를 포기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었으나, 제네바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거점을 확장하고 안정화하는 실용주의적 선택을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Asselin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제네바 회담의 합의문은 베트남을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일시 분할한 후 1956년에 총선거를 통해 단일 정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본래 북베트남은 일시적 남북 분할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분할 기준선을 북위

16도선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북위 16도선을 기준으로 분할되는 경우에, 베트남의 마지막 봉건왕조였던 응우옌(Nguyễn) 왕조의 수도인 후에가 북베트남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들어오게 되고 중부의 거점 항구도시인 다낭(Đà Nẵng) 시도 DMZ에 근접하여 남부의 경제·군사적 거점으로 내주지 않을 수 있었다. 16도선 분할 주장이 내포한 전략적 의미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로 통하는 안정적 육로를 확보해 ‘인도차이나’의 허브를 구축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후에가 지닌 정치적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은 1945년 8월 혁명이래 호치민이 이끄는 사회주의 세력에 위협적인 정치적 도전을 해오고 있었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견제로써도 그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호치민은 협상 대표였던 팜반동(Phạm Văn Động)에게 16도선을 밀어붙일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회담 결렬선언과 즉각적인 군사적 개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전술적 분할’을 받아들였다(Asselin 2011:170-173). 그나마도 미국은 최종선언문에 사인하지 않고, 회담 직전 구성된 남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들어 자신들만의 ‘단독입장(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ts position)’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베트남 통일을 위한 선거 일정은 남베트남 정부의 입장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과 UN이 감시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반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냉전체제가 만들어낸 복잡한 정치적 계산법과 상황적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 속에서 만들어진 ‘협정(accords)’은 결국 베트남에 전운(戰雲)을 불러 모으는 주문이 되고 말았다.

1954년 베트남의 남북이 17선으로 분할된 후, 후에는 DMZ로부터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국경’ 거점 도시가 되었다. 1968년경에 약 12만 명에서 14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알려지는데, 인구의 대다수는 중국의 자금성을 모델로 건축되었다는 후에성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사실상 많은 기록들이 언급하듯, 미국의 북폭이 시작되고, 한국군도 파병되어 오던 1965년 이후에도 후에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곳이었다고 한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보급로’로 이용되었던 ‘호치면 루트’의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케사잉(khê sanh)을 확보하는 것이 전쟁 당사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후에는 1968년 설 전까지는 특별한 전투가 없었으며, 주민들 내부에 형성된 좌우 정치 세력 간에도 특별한 분쟁은 없었다고 한다. 1968년 이전까지 후에는 그저 “남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Willbanks 2007: 42)였을 뿐이었다.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심지어 안전한 도시였던 후에가 전운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은 1967년이였다. 북베트남군은 케사잉에서의 전투 경험을 통해 1954년 디엔비엔푸와 같은 상황은 남베트남에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68년 무신년 설 공세 계획’이 1967년 늦여름에 완성되었는데, 지압(Giáp) 장군은 특별히 이 계획에 후예를 비롯 이제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도시들을 포함시켰다(Willbanks 2007: 10-11). 남베트남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도심에서의 봉기는 시민들에게 호응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 따라 미군기지들 뿐 아니라 남부의 주요 도시가 봉기지역으로 제안되었던 것이다.

1968년 1월 30일 베트남 남부의 주요도시와 미군 군사시설에서 ‘총공세와 봉기’가 개시되었다. 남베트남군 상당수는 ‘설 휴가’를 떠난 상태였고, 미군 또한 남베트남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봉기와 전투에 대응하기엔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렇게 공세 초반에는 ‘준비된’ 북베트남군과 민족해방전선이 상황을 신속하게 주도해 나갔다. 1968년 1월 31일 오전, 후에성의 대형 국기계양대에는 베트남 민주 공화국의 깃발이 펄럭였다. 그것은 북베트남군과 민족해방전선이 후예를 완전히 장악했음을 의미했다.

곧바로 미군과 남베트남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개시되었고, 무차별 포격과 방화 등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켰다. ‘설 공세와 봉기’가 개시된 지 25여일 만에, 후예가 다시 남베트남 정부의 관리 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도시가 입은 피해는 충격적이었다. 후에성의 3분의 2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고, 인구 14만 명 중 116,000여명이 집을 잃고, 약 5,800여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Willbanks 2007: 54-55). 사실상 후예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는 폐허의 도시가 되고 말았다.

‘설 총공세와 봉기’ 과정 중 후예에서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2월말 미군이 후에성 외곽의 자호이(Gia Hội) 학교 운동장의 뒤엎어진 흙을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학교 운동장을 파보자 묶인 상태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이들의 시체가 쏟아져 나왔고, 이후 남베트남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 후에 외곽에서 급히 암매장된 집단 매립지들을 발굴해냈다. 희생자들은 “군인, 공무원, 상인, 성직자, 지식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후에 점령기간 혹은 후예에서 퇴각하면서 북베트남군과 민족해방전선에 의해 죽임과 매장을 당한 것이었다.

남베트남 정부가 발굴된 시신들에 대한 기록 영화를 만들고, 공산세력에 의한 ‘학살’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자, 북베트남은 즉각적으로 남베트남 정부의 조작일 뿐이며 고도의 심리전 전술일 뿐이라고 일축하였다. 그러나 남베트남 사람들에게는 1968년 무신년 설 이후 후예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당시 위독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고향인 후에에 돌아왔던 작가 나카(Nhã Ca)는 당시 그녀가 후에에서 보고 들었던 내용을 친구나 이웃의 실명을 직접 인용하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 한편의 책을 출간하였다. 그녀의 책 『후에를 위한 애도의 머리띠』(Nhã Ca 2014)는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영화로 제작되기까지 했다. 나카의 책이 남베트남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학살’의 실제적 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1968년 후에’에 관한 논쟁은 ‘진실게임’에 휘말리게 되었다.

미국의 역사가이자 당시 미국정부기관 요원으로 사이공에 머물고 있던 더글라스 파이크(Douglas Pike)는 1970년 “The Vietcong Strategy of Terror”(Pike 1970)를 통해, 남베트남에서 ‘공산세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을 정리하며 ‘후에 학살’을 대표적 사례로 매우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후에학살’은 세 가지 특징점이 있는데, 첫째로 살상행위가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둘째로 거의 대부분 지역간부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으며, 세 번째로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독재’형 학살과는 차이가 있다(Pike 1970: 52-53). 그는 또 후에가 남부에서 가장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 곳 중의 하나였으나, ‘공산세력’이 그들을 제거하고 ‘학살’ 증인들 또한 함께 살해함으로써 학살의 실제적 증언이나 기록을 찾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증언들이 소개되면서, ‘후에학살’ 문제 또한 상당히 복잡한 ‘진실공방’이 진행되었다. 파이크의 저술이 영어권에 소개되면서, 그것이 남베트남 정부의 견해만을 대변하고 사상범이나 전향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그 중 정치학자 포터(Porter 1974; Porter and Herman 1975)는 파이크의 ‘폭로’와 ‘가정’에 가장 비판적이었다. 그에 따르면, 파이크는 사건의 실제적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민족해방전선의 전술’을 스스로 다시 써주는 것보다도 같은 작업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개인적 적대감에 기반하여 계획적 학살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스스로 대신 써주고 사건을 ‘학살’로서 재구성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간의 논쟁은 미국의 언론들이 ‘학살’ 문제를 집중 보도하던 1970대 초에 집중된 이후 지속되지 않았다. 학살이 있었느냐 혹은 없었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건의 규정성에 관한 이념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증언’의 불안정성과 관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그것은 ‘사건 자체에 대한 신심(fidelity)’(Badiou 2005)의 문제가 된다. 라캉(Lacan)의 유명한 격언처럼 우리가 ‘부분적 진실(partial truth)’ 밖에는 말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역사적 실체는 부분적으로만 재구성될 수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있었다고 혹은 없었다고 믿는 관계들의 경합이 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1975년 베트남전이 종전을 선언한지 40년이 흘렀지만, 어느 누구도 전쟁기간 중 발생한 ‘살인행위’에 대해 혹은 ‘학살을 저지른 자’로서 반성과 고백을 실천한 사람은 없다. 그 사이 파괴된 도시에서의 삶을 등지고 어디론가 떠났던 이들은 자신들의 이산(displacement)적 상황이 ‘1968년 무신년 설’기간 동안의 전투와 학살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며 공식적 기억에서 배제되어버린 개인적 경험과 고통을 삭여왔다.

사건자체의 ‘과잉(excess)’ 생산이 시작되는 지점은 사건의 종료 후이며, 증언자들의 정서적 상태 및 사건과 맺는 관계 그리고 ‘증언의 상황’들에 영향을 받는다. 베트남 당국가가 ‘조작된 사실’일 뿐이라며 진상 규명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 ‘학살 증언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총공세와 봉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영웅과 열사들에만 역사적 주체로서 정당성을 부여해 ‘상이한 기억’들을 아우르는 것은, 분명 전쟁이 낳은 고통의 치유나 화해와는 거리가 있는 일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1968년 후에’는 여전히 전투 중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애도와 기념 사이

2008년 1월 해외거주 베트남인 최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설맞이 버라이어티 쇼인 ‘Paris By Night 91’이 무대에 올려졌다. 1983년 과거 식민모국의 수도인 프랑스 파리에서 해외 거주 베트남인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한 음악회로 시작된 이후, 1990년대에는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 현재까지 매년 수차례 각기 다른 주제들로 공연되고, 녹화된 매회 공연실황은 전 세계 베트남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 가장 인기 있는 쇼 중 하나가 되었다. 2008년 첫 공연의 제목 ‘후에, 사이곤, 하노이(Huế, Sài Gòn, Hà Nội)’는 베트남의 중부, 남부 그리고 북부지역을 상징하는 도시 이름으로, 베트남의 영토성에 기반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주요도시를 언급하는 순서에서, 2008년 제91회 공연의 제목처럼 후에가 가장 앞에 배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베트남전쟁 기간 중 “전세계에서 가장 바쁜 비행장” (Delezen 2003: 54)이 된 이래 중부지방의 최대 도시로 발전한 다낭(Đà Nẵng)이 중부지역의 대표적 도시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분명

2008년 설 맞이 ‘Paris by Night(이하 PBN)’에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를 상징하는 하노이와 사이곤(현재의 호치민시)과 함께 주요한 도시로 ‘공연 제목’에 이름을 올린 것은 전쟁전의 베트남에 대한 향수(nostalgia for the pre-war Vietnam)와도 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2008년 40주기를 맞은 후에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쇼의 사회를 맡은 응우옌 응옥 응안(Nguyễn Ngọc Ngạn)은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가 후에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무신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쇼를 준비한 여러 이유중의 하나는 올해가 ‘무신년’의 40주년 (1968년~2008년)임을 기념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후에, 사이곤, 하노이라는 제목을 단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Watt 2008)”

PBN 91 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순서는, ‘특별초대 손님’으로 나온 후에 출신 전 하원의원 (Cựu Dân biểu)의 ‘학살’ 증언과 곧바로 이어진 뮤지컬 ‘후에 머우턴(Huế Mậu Thân; “무신년의 후에”) 공연이었다. 후에의 상징인 호영강 (Sông Hương)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배경으로 사랑의 노래가 흐르고 평화로운 삶이 군무로 표현되던 중, 갑자기 다리가 폭파되고 무용수들이 무대 위로 쓰러진 사이로, 아이의 비명만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끊어진 다리 위로 곧이어 1968년 후에와 관련해 남베트남 정부가 제작 배포했던 기록 필름이 흐르며, ‘사이곤의 디바’로 칭송받는 가수 카잉리(Khánh Ly)가 검정색 아오자이(검정색 아오자이는 일반적으로 천주교도의 장례복장이다. ‘후에학살’에서 대부분의 희생자는 천주교도였다)를 입고 등장했다. ‘베트남의 밥 딜런(Bob Dylan)’이라고 불리우는 음악가 찰롱선이 그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후에에서 직접 ‘무신년 설’을 경험하고 만든 노래—‘시체들을 위한 노래’—가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며 생존한 아이를 안은 카잉리와 함께 뮤지컬이 막을 내리자, 극장을 가득 메운 3000여명의 관객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국외에서 PBN 91 무대를 통해 40년이 지난 1968년 설의 기억들을 상기하며, 죽은 이들에 대한 애도를 모색하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 국내에서는 다른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베트남 국방부와 트어티엔-후에성(Thừa Thiên-Huế)의 당위원회는 후에에서 ‘1968년 무신년 봄 총공세와 봉기’ 4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1968년 당시 찌티엔 (Khu Trại Thiên)에서 복무하며 후에에서 “격렬했던

총공세와 봉기에 직접 참여했던”, 전 공산당 서기장 레카피에우(Lê Khả Phiêu)를 비롯하여, 1968 무신년 설 작전에 참여했던 200여명의 군인, 당원, 공무원, 원로 혁명가들이 제출된 100여편의 글을 두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전 서기장 피에우는 다음과 같이 1968년 무신년 총봉기의 의의를 정리하였다.

“(1968년 무신년 총봉기는) 군과 남부 및 전체 인민들의 거대한 승리였으며 미 제국주의의 침략의지를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군의) 북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파리회담에서 담판을 하는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

피에우의 입장은 베트남 당-국가의 일반적인 견해, 다시 말해 ‘승전’과 ‘해방’의 관점에서 1968년의 설 총공세와 봉기를 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1968년 설 총공세 계획’이 그 자체로 노정했던 실패들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도 배제해 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당시의 총공세는 ‘미성숙한 조건’을 무시한 무모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당내부의 평가도 없지 않았다(Willbanks 2007). 실제로 후예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봉기는 단 며칠 내에 모두 진압되었고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만을 결과하였다. 무엇보다 후예에서 처럼 모든 ‘민족해방전선’의 모든 지역간부들이 대중적으로 노출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남부작전에서 ‘민족해방전선’의 역할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1968년 이후 사실상 남부에서 ‘인민봉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린 것은 북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전쟁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승리적 관점’이 아닌 그 어떤 내러티브도 허용하지 않는 베트남 당-국가의 입장은 바오 닝(Bao 1995)의 ‘전쟁의 슬픔’에 대한 검열 논쟁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베트남 군이 발행하는 신문을 중심으로 ‘영웅적 전쟁’을 ‘개인적 슬픔’의 문제로 ‘격하’하는 바오닝의 책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결국 재판이 나오면서 작가가 일부 문단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전쟁은 개인의 삶을 생사의 기로에 놓는 폭력극장으로서 기능하기에 그 공포와 부끄러움이 ‘승전의 환희’보다도 일반적인 것임에도, ‘민족주의적 전쟁’이자 ‘사회주의 공화국’ 건설에 결정적이었던 전쟁의 역사서술들은 사적인 것들의 폭력적 배제를 통해 그 자체를 신성화한다.

2008년 학술대회 이후 ‘후예학살’ 증언과 저술들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방어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13부작으로 제작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1968년 무신년

7부”(Lê 2013)는 ‘후에에서의 26일 밤’이라는 제목으로 ‘후에 붕기’에 참여했던 이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방영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나까의 책에서 실명으로 언급된 ‘완장 찬 이들도’ 출연했는데, 모두들 한 목소리로 후에에서 학살은 없었으며, 일부 개인적 원한을 지닌 자들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인민해방군 혹은 ‘민족해방전선’과 무관한 것임을 역설했다. 그리고 그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였던 화력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노력과 희생을 통해 후에를 무려 26일간이나 ‘해방’했던 역사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이러한 증언들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인명손실’ 혹은 ‘민간인 피해’를 ‘부수적 피해 (Collateral Damage)’로 분류해 주변부화 시킨다는 점이다. 이 ‘피해’는 베트남사회에서 전쟁 중 목숨을 잃은 자들을 선별해 가치를 부여할 때 그 범주가 없는 죽음들이다. 인류학자인 손 말라니(Marlarney 2002)는 베트남 사회에서 ‘희생(hi sinh)’과 ‘열사 (liệt sĩ)’가 지닌 문화적 가치들을 분석하면서, ‘조국이 공을 기억한다(Tổ Quốc Ghi Công)’는 열사묘역의 비석이 ‘기억’의 독점적 대상을 설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한 바 있다. ‘피해’는 ‘공적’과는 관련이 없기에, 사실상 사적 기억 혹은 가족의 집단적 기억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구분들은 결국 ‘전몰자 추모’ 의례에서도 민간인들에 대한 애도를 배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민간인들의 죽음은 결국 기념의 장에서도 애도의 장에서도 모두 배제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앞서 논했지만, 상당수 ‘해외거주 베트남인들’은 ‘1968년 무신년 설’을 맞은 후에가 25일여 동안 북베트남 군과 지역의 ‘해방군(Quân Giải Phóng)’ 세력—‘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혹은 미국과 남베트남 정권에 의해 비하적인 표현인 ‘비엣 쯡(Việt Cộng)’으로 불리운 세력을 말한다—에 의해 점령됐던 사건을, ‘학살(Thảm Sát)’—학살(massacre)로 번역되는 베트남어 ‘탐삿(thảm sát)’은 한자어 참살(慘殺)에서 연유한 단어이다—로 기억하고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극단적인 해석의 대립은 물론 단순하게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가 ‘전쟁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과 이해를 통해 ‘인식 차’를 좁혀가는 노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상 ‘후에학살’의 숙제는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국가가 기억하지 않는 죽음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속적 원한’으로 남겨지기 쉬운 ‘애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정처(rooted)’라는 개념은 베트남의 가족 문화에서 아직까지도 중요한 문화적 가치 중 하나이다. 전 세계 400여만 명의 해외교포 중, 설이면 해마다 오십만 명 이상의 해외교포가 고향을 방문해 친지를 만나고 조상묘를 둘러보는 것은 ‘삶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실천이다. 베트남의 속담 중 ‘물을 마시며 그 기원을 기억한다(Uống Nước Nhớ Nguồn)’는 개인의 삶의 뿌리를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모와 개인의 텃줄이 묻힌 곳,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은 삶의 기원을 찾는 것이며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에학살’의 경우처럼, ‘돌이킬 수 없는’ 하여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정처 없는 애도’ 다시 말해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증폭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오늘날 베트남에서 1968년 후에를 기억하는 방식은 여전히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다. 전쟁에서 ‘패전자’를 기억하고 함께 애도 할 수 있는가, 일상화 되어버린 죽음의 극장인 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 전몰자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그 유산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회를 시험하고 ‘민족주의’의 미래를 두고 경합하는 양상들을 새롭게 만들어 낸다.

전후 민족화합(Hoa Hợp Dân Tộc)을 위한 도전—용서, 화해 그리고 애도의 정치

2015년 초 ‘해방 40주년’을 맞이하는 베트남에서는 유독 해외 교포들과의 관계개선과 ‘민족화합’이라는 화두가 붓물처럼 터져 나왔다. Vietnamnet 에서는 시리즈 기사를 내보내며, 한 대사의 말을 빌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전승자’로서 성숙함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기사를 실었다.

미국에 갔을 때, 구제도(chế độ cũ)에 복무했던 몇몇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전쟁때 우리는 말이 넘어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전승을 거두고 내 말에 앉은 사람들이지요. 매우 빈번하게, 우리는 우리말에 올라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사하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길 기대합니다”(응우옌푸빙, Nguyễn Phú Bình)

인용문에서처럼 다시금 변주되는 ‘전승/패전’의 논리가 보여주는 바는, 전쟁 때 ‘말을 탔던’ 사람들의 화해와 화합 가능성에 다름 아니다.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들은 ‘말’을 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이 빼앗긴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고 스스로의 자리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에 대한 ‘애도’의 가능성이었다.

‘학살’과 같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에 관해 데리다(Derrida 2001)는 그 범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용서에 관한 지정학의 지평’에 놓여있음을 지적하였다. 어느 곳에서 발생한 ‘비인륜적 범죄’가 ‘어느 곳에서 있었느냐’가 문제시되고 그 진실을 밝히는 위원회들이 도처에서 활동을 하며, ‘화해’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평결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만이 진정한 용서인 한에서 용서는 그 자체로 소멸해 갈 것’이라는 견해를 펼쳤다. 어쩌면 ‘1968년 베트남 후에’에서의 ‘학살’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용서와 화해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용서는 그 자체의 논리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즉 사건이 지닌 ‘용서 불가능성’을 끊임없이 참조해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는 비록 용서를 유예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언정, 화해의 의례로서 그 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 말 위에서 떨어지거나 말 위에 올라탄 사람들의 관점에서 전쟁의 아픈 상처에 접근하는 것은 그것이 승자의 관점이던 패자의 관점이던 공히 문제적이다. 그 말들에 짓밟혀버린 삶들에 경의를 표하고 애도의 예를 함께 올리는 시도들은 정치 없이 떠도는 전쟁의 유령들을 다스리는 소중한 실천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68년 무신년 후에’ 문제는 베트남전쟁의 진정한 ‘종전’ 가능성을 시험하는 바로미터이다. 또한 냉전시대 아시아의 전쟁경험과 기억들을 ‘애도의 정치’라는 가능성 속에서 사고 할 수 있는 장으로써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Abuza, Zachary

2002 The lessons of Le Kha Phieu: Changing rules in Vietnamese politic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4(1):121-145.

Agamben, Giorgio

1999 Remnants of Auschwitz : the witness and the archive. New York: Zone Books.

Asselin, Pierre

2011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nd the 1954 Geneva Conference: A revisionist critique. Cold War History 11(2):155-195.

Badiou, Alain

2005 Being and event. London ; New York: Continuum.

Bảo, Ninh

1995 The sorrow of war : a novel of North Vietnam. F. Palmos, transl. New York: Pantheon Books.

Delezen, John Edmund

2003 Eye of the tiger : memoir of a United States marine, Third Force Recon Company, Vietnam. Jefferson, N.C.: McFarland.

Derrida, Jacques

2001 On cosmopolitanism and forgiveness. London ; New York: Routledge.

Dror, Olga

2014 Translator's note. In Mourning headband for Hue : an account of the battle for Hue, Vietnam 1968.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Hirschman, Charles, Samuel Preston, and Vu Manh Loi

1995 Vietnamese Casualties During the American War: A New Estimat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4):783-812.

Lê, Phong Lan dir.

2013 Phim tài liệu Mậu Thân 1968 (Tập 7) - Huế 26 ngày đêm.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1. Hà Nội.

Marlarney, Shaun

2002 The Realities and Consequences of War in a Northern Vietnamese Commune. In A companion to the Vietnam War. R. Buzzanco and M.B. Young, eds. Pp. 65-78. Blackwell companions to American history ; 7. Malden, MA: Blackwell Pub.

Nha~ Ca

2014 Mourning headband for Hue : an account of the battle for Hue, Vietnam 1968. O. Dror, trans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ike, Douglas

1970 The Viet-Cong Strategy of Terror. Saigon United States Mission.

Porter, D. Gareth

1974 THE 1968 'HUE MASSACRE'. Indochina Chronicle 33.

Porter, D. Gareth; , and Edward S. Herman

1975 The Myth of the Massacre. Ramparts 13(8).

Rummel, R. J.

1998 Statistics of democide : genocide and mass murder since 1900. Münster;

Piscataway, NJ: LIT; Distributed in North America by Transaction Publishers, Rutgers University.

Shim, Juhyung

2014 Haunted Borderland: The Politics on the Border War against China in post-Cold War Vietnam, Cultural Anthropology, Duke University.

Trung Tâm Từ Điển Học

2009 Từ Điển Tiếng Việt. Hà Nội: Đà Nẵng.

Watt, Micheal dir.

2008 Paris By Night 91: Huế, Sài Gòn, Hà Nội. Thúy Nga. Long Beach: CA.

Willbanks, James H.

2007 The Tet Offensive : a concise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